민주 장외투쟁 '쌍끌이'로 전선 확대

〈국정원 개혁+세제개편〉

"재벌·슈퍼부자 놔두고 월급쟁이 털어가기" 비난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 돌입…중산층 결집 나서

민주당이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함께 정부의 세제개편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장외투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서민·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문제를 국정원 개혁이슈와 결합시켜 지지세력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쌍끌이 전략이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유모차 부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듯이 이번에는 '유리지갑 부대', '월급쟁이 부대'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이나 슈퍼부자들이 독점하는 부가 우리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살 길인데, 이런 원칙에 크게 반하는 세제안이 발표됐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해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일(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선 "한쪽엔 국정원, 다른 한쪽엔 세금폭탄, 민주주의와 민생문제를 쌍끌이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책임론도 내세웠다.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5일 새누리당이 당정협의 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견 없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수정보완'을 약속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가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소매치기하려다 들키자 망보던 새누리당이 도둑이야 소리지르고 발뺌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의 평균 재산이 41억 1803만원"이라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슈퍼부자들의 세금을 늘리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다"고 공격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이번 세제개편안 기본정신에 대해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상의 말을 인용, "세금을 걷는 것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대변인은 "국민은 깃털을 뽑혀도 찍소리 못하는 거위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솜털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의 깃털을 뽑아 그 비명을 듣고도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논리가 해괴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과 더불어 '부자에게는 세금을, 중산층·서민에게는 복지를', '부자증세 실현, 월급쟁이 증세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내걸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장외투쟁 열흘째인 지난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개혁 촉구 2차 국민보고대회'를 연데 이어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제6차 촛불대회에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으로선 지난 3일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장외집회였다. 촛불집회는 참여연대 등 2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가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을 규탄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고, 여기에 야당들이 대거 동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주최 측은 10만명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1만6000명 정도로 추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로 '제6차 국민촛불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서 '국정원 규탄' 촛불시위

시민들 박대통령 사과 촉구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 시위가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열렸다.

충장로에서 열린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민주주의 수호 7차 촛불 문화제'에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당원,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국정원의 개혁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촛불 문화제는 노래패의 율동 등 식전 문예행사로 시작돼 국정원 규탄 및 불법 대선 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이정희 대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자칫 묻힐 뻔했지만, 국민이 들어준 촛불로 국정조사까지 하게 됐다"며 "새누리당은 진실을 가리고 국정원을 가리기 위해 방해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야 하며 공정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해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회원들의 풍자극과 시민 자유발언, 문예공연 등이 이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안 고심

기초의원만 폐지 단체장은 유지 방안 등 거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먼저 당론으로 결정한 데다 새누리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터라 '기초선거 무(無)공천'을 아예 없던 일로 되돌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나 당내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다루는 당헌·당규 개정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11일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민과 약속을 한 만큼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구체적 방법을 논의해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나면 돈 있는 지역의 토호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전과자를 걸러낼 방법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찬반 논란 속에 당 일각에서 대안 모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의원에 대해서만 공천을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은 공천제를 유지하는 방안, 아예 기초의원 선거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는 언제든 국회의원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구청장,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을 견제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세법개정안 입장차 뚜렷

국회 처리 진통예고…與 '중산층 달래기' 보완책 고심

여야는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중산층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막겠다면서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야당의 '중산층 세금폭탄'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부담은 크게 줄고, 고소득층 부담은 굉장히 늘어난다. 중산층은 평균 한 달에 1만여원 느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 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보완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먼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1년에 16만원을 더 내야 하는 총급여 3450만~7000만원인 중산층 직장인의 부담을 줄이자는 쪽으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 정책라인의 핵심 인사는 11일 "이른바 '3450만원 기준선'을 높여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를 아예 축소하거나 아니면 평균 부담금액인 16만원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경우 자동으로 고소득층의 부담도 줄어드는 현행 세법 구조상의 문제점을 감안,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중산층과의 전면전 선포", "대기업과 부자 뒤봐주기", "월급쟁이 쥐어짜기", "국회입법권 무시 행위" 등의 격앙된 반응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김한길 대표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세제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봉급생활자와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전국민적 여론전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박근혜 정권은 전세폭탄, 물가폭탄, 세금폭탄까지 '3대 민생붕괴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때려잡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국민, 야당을 무시한 세금폭탄안이 국회를 절대 통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세제개편안은 중산층 증세·국민 기만"

민주 이용섭 의원 강력 비판

세제전문가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면서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소득자·대기업·고액 재산가에 대한 감세 기조에서 우선 벗어나 적정 과세를 해야 하고 교육비·의료비·보험료와 같은 필요경비적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개세주의'를 내세워 봉급생활자에게 십시일반이라면서 세금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적정과세와 관련, 이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0.5%에 해당하는 8만300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선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전엔 과세표준 2억원 초과에 대해 25%를 과세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항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 · 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	지상2층	PC방 203P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2층	레스토카페 166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
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
지상1층	약국 69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널드), 드롭탑 540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